

# 가족정책 국내동향

2024년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주요 현안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268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 여성가족부는 제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4.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6)

###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4.1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7](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7)

### “양육비 선지급제” 첫 명시...‘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급주 발의”

[연행뉴스, 이상서기자, '24.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0026400530?input=1195m>

###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는다”

▶ 오는 15일부터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중인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5.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3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36)

### “미혼 40% “결혼? 글썄”...열에 아홉은 “저출산정책 효과 없어”

[연행뉴스, 송서호기자, '24.05.02]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31500530?input=1195m>

###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 고독사 막기 위한 지원조례 봇물”

[연행뉴스, 박주영기자, '24.05.02]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1060800063?input=1195m>

###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와 불일치...계층별 특성 고려해야”

[뉴스스, 이연희기자, '24.05.05]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03\\_0002723685&cID=10405&pID=10400](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03_0002723685&cID=10405&pID=10400)

### “1인 가구 천만 시대... 25평 인기, 34평 넘어서 ‘국민 평형’ 됐다”

[조선일보, 정순우기자, '24.05.06]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5/06/21P77XENPVBFLQATDUG6JJOR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5/06/21P77XENPVBFLQATDUG6JJORL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학생 100명 중 4명이 '다문화'...여가부, 진로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뉴스스, 김진아기자, '24.05.09]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09\\_0002728297&cID=10220&pID=10200](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09_0002728297&cID=10220&pID=10200)

### “부모 육아휴직 6개월씩 늘린다더니...모성보호 3법 폐기되나”

[뉴스스, 권형희기자, '24.05.11]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10\\_0002730689&cID=10221&pID=10200](https://www.news1.com/view/?id=NISX20240510_0002730689&cID=10221&pID=10200)

### “아픈 부모·아이는 어쩌나... 가족돌봄휴가, 직장인 60%엔 '그림의 떡’

[한국일보, 최나실기자, '24.05.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210410003256?did=NA>

###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연행뉴스, 권민서기자, '24.05.13]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3080400001?input=1195m>

### “1인 가구’ 50% 눈 앞...정책 체감도 높여야”

[KBS, 김영종기자, '24.05.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455&ref=A>

### “지원 끊긴” 한부모가족·청소년 센터...“도움 절실”

[KBS, 김진석기자, '24.05.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3266&ref=A>

##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생활 돌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01	현재 아동·청소년·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변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가족생활 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	2024-05-02	현행법에는 위탁자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만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할을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9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자립 수단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연 1만여 명에 달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양육비 이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2024-05-0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등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지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 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족정책 관련 영상

YOUTUBE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https://youtube.com/shorts/-S1ald3J244?si=EYn5C2i4aTdT5TaVb>



**양육 공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https://youtube.com/shorts/2uqarGfWJY?si=cFQQvq6Dmfc4cJlJg>

##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가족친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 -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인증기업을 늘려왔으나 우리나라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업의 비율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친화인증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효성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인센티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제도를 통해 인센티브가 쉽지 않고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 03.」 <a href="https://www.kwdi.re.kr/publication/reportView.do?p=1&amp;idx=132243">https://www.kwdi.re.kr/publication/reportView.do?p=1&amp;idx=132243</a>
돌봄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한 유형화과 지원 방향	장애인과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심리·사회·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돌봄 부담의 경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노동적 대처형’, ‘자녀 장애 고인형’, ‘지원 촉구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통되거나 유형화할 수 있는 돌봄 부담 내용에 따른 제언은 첫째,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건강을 점검·지원하는 사회적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가족 서비스의 보편적 지원 및 위기 대응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 자녀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Issue&Focus, 2024. 03.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href="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60970">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60970</a>
돌봄	중·노년기 사회적 지지와 가족간 돌봄 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도농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가족간 돌봄 부담과 이로 인해 높아지는 중·노년층의 우울 위험에 주목하여, 간병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 효과가 성별, 연령별, 도농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녀 685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집단별 평균 비교 및 이중 중재 효과를 포함한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간 돌봄 부담은 우울과 직접적으로 정적 관련이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가족간 돌봄 부담에 따른 우울 수준 증가를 유의하게 낮추는 중재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에는 성별, 연령별, 도농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여성 및 50~60대,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지지의 보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간 돌봄 및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연령별, 도농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연구, Vol.44, No.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href="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70767">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70767</a>
상담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화 및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 등반이환의 장애 위단을 유형화하고, 장애집단 유형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한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2차와 4차 조사에 참여한 재난피해자 1,06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자의 2년 차 정신건강 장애집단은 3개 집단(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재난피해자의 4년 차 정신건강 장애집단은 2개 집단(일반군, 위험군)으로 유형화되었다. 셋째, 2년 차에 일반군이었던 재난피해자가 4년 차에 위험군으로 전이될 확률은 10%였고, 2년 차에 위험군과 고위험군이었던 재난피해자가 4년 차 위험군으로 전이될 확률은 각 41.7% 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2년 차 일반군의 경우 자연재난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4년 차 위험군보다는 일반군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2년 차 고위험군 재난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4년 차 일반군보다는 위험군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등반이환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사회연구, Vol.44, No.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 href="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70763">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70763</a>